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

2017.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28.4조원(7.1%) 증가한 총지출 42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 재원조달 방법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정건전성,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정총량에 대하여 분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현금급여 재정사업과 같은 유형별 분석을 확대 함으로써 거시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예산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소관부처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부처의 정책·사업들을 단위·세부사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봄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틀을 유기적·통합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재정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편성·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분석시리즈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차 례

CONTENTS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I. 예산안 개요 / 3

- 1. 현 황 3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6
- 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8

II. 주요 현안 분석 / 9

- 1.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9
 - 1-1. 국민외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9
 - 1-2. 사업수행기간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4
 - 1-3. 국민외교백서 자문단 구성·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17

III. 개별 사업 분석 / 19

- 1. 재외공관 간 사증심사 보조인력 조정 필요 19
- 2. 여권만료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필요 22
- 3. 효율적인 공공외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정비 필요 24
- 4. 대테러중점공관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30
- 5.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32
- 6. 아세안문화원 운영의 차별화·내실화 노력 필요 36



7.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사업의 다른 사업과의 통합·연계 필요	39
8. 독도 홍보 및 인식제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43
9. 세계시민센터 지원 사업의 면밀한 관리 필요	45

[통일부]

I. 예산안 개요 / 51

1. 현 황	51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55
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56

II. 주요 현안 분석 / 58

1.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58
1-1. 통일국민포럼의 효율적 운영 필요	60
1-2. 통일국민협약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사업 추진 필요	62

III. 개별 사업 분석 / 63

1.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의 효과성 검토 필요	63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장기적인 운영전략 마련 필요	67
3.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필요	71
4.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 간 관련 업무범위 명확화 필요	73
5.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활성화 노력 필요	76
6. 통일교육원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명확한 역할 분담 필요	79



CONTENTS

7.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84
8.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의 면밀한 관리 필요	8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 예산안 개요 / 91

1. 현 황	91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92
3. 예산안 주요 특징	93

II. 개별 사업 분석 / 94

1. 법정위원회 참석률 제고 노력 필요	94
2. 간부 자문위원 활동지원비 지급 규모 및 비목 검토 필요	97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¹⁾ 국제교류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은 3,7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89억원(8.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707억원, 국제질병퇴치기금 416억원, 국제교류기금 614억원이다.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72,639	249,398	249,398	270,737	21,339	8.5
- 일반회계	272,639	249,398	249,398	270,737	21,339	8.5
기 금	87,556	95,402	95,402	103,004	7,602	8.0
- 국제질병퇴치기금	32,147	33,556	33,556	41,643	8,087	24.1
- 국제교류기금	55,409	61,846	61,846	61,361	△485	△0.8
합 계	360,195	344,800	344,800	373,741	28,941	8.4

주: 총수입 기준

자료: 외교부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은 2조 3,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02억원(2.2%)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조 2,576억원, 국제질병퇴치기금 410억원 및 국제교류기금 573억원이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2017년 1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정으로 그간 정부 예산 외로 운영되던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이 국가재정에 편입되었고, 명칭이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085,583	2,206,434	2,206,434	2,257,553	51,119	2.3
- 일반회계	2,085,583	2,206,434	2,206,434	2,257,553	51,119	2.3
기 금	86,793	99,165	99,165	98,276	△889	△0.9
- 국제질병퇴치기금	37,713	36,911	36,911	41,003	4,092	11.1
- 국제교류기금	49,080	62,254	62,254	57,273	△4,981	△8.0
합 계	2,172,376	2,305,599	2,305,599	2,355,829	50,230	2.2

주: 총지출 기준

자료: 외교부

나. 세입·세출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2,707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3억 3,900만원(8.5%) 증가하였다.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72,639	249,398	249,398	270,737	21,339	8.5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2조 2,575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1억 1,900만원(2.3%) 증가하였다.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085,583	2,206,434	2,206,434	2,257,553	51,119	2.3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외교부 소관 2개 기금의 수입계획안은 2,34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0억원 (22.4%) 증가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은 831억원에서 852억원으로 2.5% 증가, 국제교류기금은 1,085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37.7% 증가하였다.

[2018년도 외교부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제질병퇴치기금	81,715	83,129	83,129	85,214	2,085	2.5
국제교류기금	110,943	108,471	108,471	149,337	40,866	37.7
합 계	192,658	191,600	191,600	234,551	42,951	22.4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2018년도 외교부 소관 2개 기금의 지출계획안은 2,34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0억원 (22.4%) 증가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은 831억원에서 852억원으로 2.5% 증가, 국제교류기금은 1,085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37.7% 증가하였다.

[2018년도 외교부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제질병퇴치기금	81,715	83,129	83,129	85,214	2,085	2.5
국제교류기금	110,943	108,471	108,471	149,337	40,866	37.7
합 계	192,658	191,600	191,600	234,551	42,951	22.4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외교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174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전략사업비(ODA) 등 2개 사업이,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1개 사업이, 국제교류기금은 공공외교 기반확대, 세계시민센터 지원 등 2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외교부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2개)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1,500
	전략사업비(ODA)	10,000
국제질병퇴치기금 (1개)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2,040
국제교류기금 (2개)	공공외교 기반확대	2,691
	세계시민센터 지원	1,130
합 계		17,361

자료: 외교부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② ODA 사업 15개, ③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은 2018년부터 시작되는 대아프간 군경분야 추가지원(4,500만 달러) 등으로 인해 증액되었으며, ODA 사업은 계속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연간 소요 증가가 반영되었다.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사증심사 보조인력 증원 및 아포스티유 서비스 향상 등에 따라 증액되었다.

[외교부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7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119,329	119,329	172,803	53,474	44.8
	필리핀(ODA)	15,366	15,366	20,468	5,102	33.2
	방글라데시(ODA)	7,735	7,735	10,145	2,410	31.2
	몽골(ODA)	3,742	3,742	6,506	2,764	73.9
	파키스탄(ODA)	1,038	1,038	1,509	471	45.4
	아프카니스탄(ODA)	1,071	1,071	3,184	2,113	197.3
	가나(ODA)	2,738	2,738	5,829	3,091	112.9
	르완다(ODA)	6,350	6,350	11,812	5,462	86.0
	세네갈(ODA)	5,475	5,475	9,912	4,437	81.0
	페루(ODA)	6,400	6,400	8,400	2,000	31.3
	볼리비아(ODA)	6,450	6,450	9,574	3,124	48.4
	파라과이(ODA)	4,653	4,653	11,140	6,487	139.4
	중남미지역비중점국가그룹(ODA)	16,666	16,666	22,000	5,334	32.0
	아제르바이잔(ODA)	1,235	1,235	2,087	852	69.0
	이라크(ODA)	4,400	4,400	14,312	9,912	225.3
	팔레스타인(ODA)	5,100	5,100	7,268	2,168	42.5
	재외국민영사서비스지원	4,725	4,725	6,984	2,259	47.8
	합 계	212,473	212,473	323,933	111,460	52.5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외교부

2018년도 외교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제위상에 부합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 제고 및 책임 있는 중견국 역할을 지속 강화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원조를 강화하였고, ② 해외에서의 테러 및 대형재난 발생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재외국민 영사민원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③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외교센터 설치 및 대내 공공외교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사업은 외교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정책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 조직과 신규 설치되는 국민외교센터가 차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시민센터 지원 사업은 2017년 8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설립된 세계시민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계시민센터의 운영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사업은 24시간 해외 사건·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소속으로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연락체계 및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대응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1. 국민외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15억원으로, 국민외교센터 설립 13억 9,400만원, 국민외교포럼 운영 6,900만원, 국민외교백서 추진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0	0	0	1,500	1,500	순증
국민외교센터 설립	0	0	0	1,394	1,394	순증
국민외교포럼 운영	0	0	0	69	69	순증
국민외교백서 추진	0	0	0	36	36	순증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외교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정책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2017년 7월부터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지역공공외교담당관실에 국민외교 추진 TF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TF는 현재 국민외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국민외교 개념 및 목적에 대한 홍보 활동, 국민외교 추진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731-404

나. 분석의견

국민외교센터와 기존 조직과의 차별성 확보 등 동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민외교센터는 각종 세미나, 공청회, 국민외교포럼 등을 개최하고, 국민외교백서 집필을 추진하며, 온라인 국민제안 접수 및 온라인플랫폼 유지·관리, 정기 여론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아웃리치 활동 등을 수행한다.

[국민외교 추진 프로세스 및 국민외교센터의 역할]

단계	수행주체	내 용
① 의제설정	외교부	주요 외교사안 중 국민 관심도 및 공론화 가능 여부를 감안하여 선정
② 여론조사·빅데이터 분석/국민 제안접수	국민외교센터	전문가를 통한 여론조사 실시, 빅데이터 분석,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국민제안 접수 및 정리
③ 전문가·국회 대상 간담회 개최	국민외교센터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후 결과를 국회와 공유
④ 보고서 작성	국민외교센터	간담회를 통해 조율된 정책방향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민 외교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보고서 작성
⑤ 정책 반영 검토	외교부	정리된 보고서를 정책기획관실 국민외교 전담부서 혹은 TF, 해당 실국이 공동 검토하여 정책 반영 여부 등을 검토
⑥ 결과 공유	외교부, 국민외교센터	온·오프라인 공유(외교부 홈페이지, SNS 등) / 중장기 외교 전략 국민 보고서 등에 적시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외교부는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대국민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대변인실 소관의 외교홍보역량강화²⁾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0% 감소한 12억 6,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퍼블릭아웃리치 3억 6,300만원, 외교목표별 기획홍보 3억원, 온라인홍보 강화 4억 2,900만원, 공보서비스 강화 1억 3,000만원, 외교사료관 토요개관 프로그램 4,000만원이다.

2) 코드: 일반회계 7034-401

[2018년도 외교홍보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외교홍보역량강화	1,209	1,777	1,777	1,262	△515	△29.0
퍼블릭아웃리치	275	315	315	363	48	15.2
외교목표별 기획홍보	400	300	300	300	0	0
온라인 홍보 강화	344	1,013	1,013	429	△584	△57.7
공보서비스 강화	147	130	130	130	0	0
외교사료관 토요개관 프로그램	43	19	19	40	21	110.5

자료: 외교부

퍼블릭아웃리치 사업은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과 학교방문 강연 프로그램, 대학생으로 구성된 외교부 서포터즈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제고 및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외교목표별 기획홍보 사업에서는 매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외교 정책을 선정하여 웹페이지, 리플렛, 전광판, 서적광고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온라인홍보 강화 사업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매체를 활용한 외교정책 홍보 및 대국민 소통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공보서비스 강화 사업은 출입기자단, 해외 언론인 등과의 교류를 통해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홍보와 대국민 지지 확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외교사료관 토요개관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내용을 고려할 때, 대변인실과 국민외교센터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정책적 지지기반 확대라는 큰 틀에서 사업목적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2017년 외교홍보역량강화 사업 실적(9월 기준)]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세부 내역	목적	대상	실적	예산액	집행액
퍼블릭 아웃리치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외교부 견학 홍보	대국민	총 15회 실시	315	252
	학교 방문 강연 프로그램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제고 및 관심 유도	초·중고 학생	총 72회 실시		
	Friends of MOFA 서포터즈 행사	외교정책 홍보 및 외교부 이미지 제고	대학생	외교부 공식 블로그에 기사 및 영상 131건 게재		
	홍보 영상·리플렛	견학, 강연 등 행사 지원	대국민	-		
외교목표별 기획홍보	홍보동영상	국민안전 관련성이 크거나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외교정책 선정, 홍보	대국민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지구청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캠페인 출범, 웹페이지 개설, 설명회 개최, 홍보영상 제작, 전광판 송출, 온라인 홍보, 해외여행 서적 내 ‘지구청년’ 광고지 삽입	300	271
	홍보 책자, 리플렛, 스티커					
	버스 및 지하철 광고					
	부스 광고, 전광판 광고					
	민간 제휴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홍보 강화	소셜생방송	외교정책 홍보	대국민	총 14회 방송	1,013	726
	SNS 홍보 활동	국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	대국민	페이스북 총 501건 트위터 총 264건		
	재외공관 홈페이지 및 SNS 교육	애로사항 청취 및 홍보 노하우 공유	재외공관 홈페이지·SNS 담당자	-		
	재외공관 홍보 콘텐츠 현지어 번역 지원	양질의 현지어 콘텐츠 제공	재외국민·현지인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지원 88건		
공보서비스 강화	기자단/대변인 교류사업	공보분야 협력 및 상호 이해 제고	내외신 언론 등	일본 기자단 4명 방한 (2017. 3)	130	104
	출입기자단/언론인 접촉 등 오·만찬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대국민 지지 확보	내외신 언론	출입기자단 간담회 및 업무 오·만찬 등 다수		
	해외언론인 초청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증진	해외 언론인 (개도국 위주)	FEALAC 외교장관회의 (8.29-9.1, 부산) 계기 초청		
외교사료관 토요개관 프로그램	외교사료관 토요프로그램	외교 관련 직업 체험 및 교육	초·중고 학생	외교관학교 수업 720명 전시해설 2,015명	19	26
계					1,758	1,353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실의 외교홍보역량강화 사업은 국민에 대한 일방향적인 홍보인 반면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사업은 쌍방향적인 소통의 성격을 갖고 있어 차별화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홍보” 사업과 “소통”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민외교센터가 차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센터는 2018년 4월 개소 예정이며, 센터 상근인력은 총 12명으로 인력운영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센터장은 민간인 임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동 센터를 외교부장관 직속으로 정책기획관실과 업무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수시 직제 또는 2018년 상반기 중 직제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향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민외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사업수행기간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 설립 내역사업에 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다. 여기에는 국민외교 추진 TF 설치 및 운영 1억 7,000만원, 센터 설치 및 운영 8억 2,700만원, 정기 여론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사업 3억 700만원, 대국민 직접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창구 설치 및 운영 2,400만원, 국민외교백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5,100만원, 외교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 360만원, 국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모 포상금 등 96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외교센터 설립 사업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세부 편성 내역	계
국민외교 추진 TF 설치 및 운영	- TF 운영 기본 경비 3×12개월= 36 - 공공요금 및 제세 2×12개월= 24 - 특근매식비 0.6×12개월= 7.2 -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연구용역 2건×25= 50 - 국민외교센터 설립 업무 추진 10명×0.03×12회= 3.6 - TF 자산 구입= 50	170.8
센터 설치 및 운영	- 센터운영 기본경비 4.775×9개월= 42.975 - 공공요금 및 제세 3×9개월= 27 - 특근매식비 1×9개월=9 - 임차료 30×9개월= 270 - 국민외교센터 설립 업무추진 10명×0.03×9회= 2.7 - 센터 상근 인력 운영 12명×3.5×9개월= 378 - 센터자산구입=98	827.6
정기 여론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사업	- 여론조사/빅데이터 활용 2개프로젝트×150= 300 - 여론조사/빅데이터 업무 추진 10명×0.03×24회= 7.2	307.2
대국민 직접 소통 강화	- 현장창구 설치 및 운영 2×12개월=24	24
국민외교백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자문단운영 40명×0.3×4회= 48 - 국민외교 자문단 업무추진 20명×0.03×6회= 3.6	51.6
외교정보 공개 확대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업무 추진 20명×0.03×6회= 3.6	3.6
국민 제안 제도 활성화	- 국민 제안 공모 포상금 2회×3= 6 - 국민 제안 제도 업무추진 10명×0.03×12회= 3.6	9.6
계		1,394.4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민외교센터 설립 사업의 예산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외교 추진 TF 설치 및 운영비는 TF 운영기간 및 향후 운영방향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외교 추진 TF는 외교부 직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에는 국민외교 추진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보고, 국민외교센터 설립 업무추진 및 설립 후 관리, 감독 및 지원, 국민외교센터를 통해 수립된 국민 의견의 정책 반영 추진 여부 검토 및 보고, 국민외교센터와 외교부간 협업 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 개소 이후에도 관리 및 협업체계 유지 차원에서 2018년도까지는 TF 유지가 필요하며, 외교부 내 국민외교센터 전담부서 신설시 TF는 전담부서로 편입될 계획이지만 전담부서 설치가 불가할 경우 당분간 존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외교 추진 TF의 2018년도 운영비는 12개월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민외교 추진 TF 현황]

소 속	인원(명)	구 성
정책기획관실	5	팀장 1, 사무관 3, 행정관 1
대변인실	1	행정관 1
문화외교국	1	서기관 1
국립외교원	1	행정관 1
계	8	-

자료: 외교부

그러나 TF는 국민외교센터 설립을 위해 설치된 임시조직으로,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는 폐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외교부의 설명대로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해도, 해당 업무의 소관은 직제 개정을 통해 정해져야 하고 관련 예산은 직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TF 운영비를 12개월 기준으로 반영한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TF와 같은 한시적 조직은 자산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³⁾ TF 운영비에 자산구입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둘째,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창구 설치 및 운영비는 실제 운영 기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에 대국민 직접 소통을 위한 현장창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12개월 운영을 기준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민외교센터는 2018년 4월 개소 예정으로 현장창구가 운영 가능한 기간은 최대 9개월이므로, 이를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

3) 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사무국, 준비단, 특별검사제, 대통령순방단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각종 행사 추진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임차(렌트)하고(210-07 임차료), 다만,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p.238.)

1-3. 국민외교백서 자문단 구성·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국민외교백서는 국민외교센터의 활동을 통해 수렴된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술하는 보고서로, 외교부는 기존의 외교백서는 외교부가 수행한 외교활동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인 반면, 국민외교백서는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외교목표와 기초를 설정하고 주요 외교의제에 대한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문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8년에는 국민외교백서의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2019년에는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및 전문가 그룹 구성 등을 수행하며, 2020년에 국민외교백서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외교백서 관련 2018년도 예산안은 총 8,800만원으로, 국민외교센터 설립 내역사업에 국민외교백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민외교백서 추진 내역사업에 국민외교백서 추진 실무협의회 운영 1,600만원과 국민외교백서 관련 전문가 정책연구용역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국민외교백서 관련 2018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구 분	세부 편성 내역	계
국민외교센터 설립	국민외교백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자문단운영 40명×0.3×4회= 48 - 국민외교 자문단 업무추진 20명×0.03×6회= 3.6	52
국민외교백서 추진	국민외교백서 추진 실무협의회 운영	- 회의준비비 0.005원×20명×24회=2.4 - 인쇄비 0.03×24회=0.72 - 임차료 1×6회=6 - 간담회 개최 0.03×20명×12회=7.2	16
	국민외교백서 관 련 전문가 정책연구용역	- 대국민인식조사 모델 개발 및 인식조사 실시	20
합 계			88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민외교백서의 자문단 구성·운영 시 기존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1988년부터 외교·통상 분야 민간전문가 130여명으로 구성(2017년 9월 현재 126명)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외교정책 기조 및 성과, 주요 외교정책 추진방향 설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연 1~2회 전체회의 및 각 실국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총 17개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 국민외교백서 자문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자문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재외공관 간 사증심사 보조인력 조정 필요

가. 현 황

외교부는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¹⁾ 사업을 통해 순회영사활동, 사증, 공증, 아포스티유 확인²⁾ 등 각종 영사민원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증면제, 사증간소화, 운전면허상호인정 등 각종 영사분야 협정체결 확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69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8% 증가하였다. 이중 재외공관 사증발급 지원 내역사업에 전년 대비 55.9%가 증가한 53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증심사 보조인력 인건비 증가와 스티커 사증용지, 영수필증 구매 증가이다.

[2018년도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4,940	4,725	4,725	6,984	2,259	47.8
재외공관 사증발급 지원	2,669	3,457	3,457	5,392	1,935	55.9

자료: 외교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831-651

2)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가리켜 아포스티유라고 한다.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거나, 국내 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나. 분석의견

재외공관별 사증발급인력 및 발급량을 고려한 사증심사 보조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중국 등 사증발급 업무가 과다한 재외공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증심사 보조인력의 한시적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수입대체경비(사증 수수료) 초과수입금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16년 법무부의 중국 등 단체관광객 사증 수수료 면제 조치³⁾ 및 사증발급 전자화 등으로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금 규모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에는 사증심사 보조인력 85명에 대한 인건비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105명의 인건비 27억 6,500만원을 상용임금(110-03목)으로 편성하였다.

사증심사 보조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재외공관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증심사 보조인력 운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증심사 보조인력 지원 재외공관별 방한 외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국가명	2015년	2016년	2017년(8월말 기준)
중 국	4,712,133	6,948,372	2,158,006
홍 콩	511,703	638,838	436,519
몽 골	63,910	62,709	50,953
미얀마	15,600	16,375	11,343
베트남	91,455	167,413	137,839
스리랑카	2,826	3,290	2,146
우즈베키스탄	20,807	30,363	21,380
인 도	27,508	32,937	20,992
인도네시아	97,820	139,486	91,601
캄보디아	6,170	8,227	4,935
태 국	305,953	399,812	258,280
필리핀	138,257	173,115	132,722
합 계	5,857,900	8,449,838	3,196,011

자료: 한국관광공사

다만, 재외공관별로 사증발급량이나 사증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규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재외공관별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법무부는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1년간 5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대상 1명당 \$15 상당의 단체사증 수수료를 면제 조치하였다.

[2017년 사증발급량 및 사증발급담당인력 현황(8월말 기준)]

공관명	사증발급량(건) (2017. 8.까지)			사증발급담당인원(명)			1명당 8개월간 발급량(건)	1명/1일 발급량 (건)
	개별	단체	합계	정규직	한시직	합계		
광저우	68,841	-	68,841	8	13	21	3,278	20
다렌	16,386	-	16,386	9	1	10	1,639	10
몽골	48,370	-	48,370	4	4	8	6,046	38
미얀마	7,498	-	7,498	2	1	3	2,499	16
베트남	81,373	46	81,419	7	5	12	6,785	42
상하이	157,502	1,347	158,849	14	13	27	5,883	37
선양	149,573	29	149,602	45	14	59	2,536	16
스리랑카	4,824	-	4,824	2	1	3	1,608	10
시안	8,933	-	8,933	4	2	6	1,489	9
우즈벡	21,519	-	21,519	6	1	7	3,074	19
우한	26,011	263	26,274	3	7	10	2,627	16
인도	9,489	-	9,489	2	1	3	3,163	20
인도네시아	82,193	248	82,441	6	4	10	8,244	52
중국	92,531	51	92,582	12	11	23	4,025	25
청두	23,853	129	23,982	2	6	8	2,998	19
칭다오	107,980	65	108,045	16	5	21	5,145	32
캄보디아	10,872	715	11,587	2	3	5	2,317	14
태국	6,155	-	6,155	2	1	3	2,052	13
필리핀	89,346	-	89,346	6	2	8	11,168	70
호치민	69,244	4,471	73,715	5	4	9	8,191	51
홍콩	8,453	-	8,453	2	1	3	2,818	18
합계	1,090,946	7,364	1,098,310	159	100	259	평균 4,241건	평균 27건

주: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적용

자료: 외교부

가. 현 황

외교부는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 개선(수입대체경비)¹⁾ 사업을 통해 여권민원실 운영, 여권 발급, 여권 서비스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신규 내역사업으로 ‘여권만료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1,002억 8,500만원이며, 이 중 여권만료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에 일반수용비(210-01목) 1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여권만료 문자알림서비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 개선	105,592	95,262	95,262	100,285	5,023	5.3
여권만료 문자알림서비스	0	0	0	128	128	순증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여권만료 문자알림서비스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여권발급 체계 하에서 여권 신청 후 발급까지 3~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소요되고, 인도적 사유 혹은 업무나 유학 목적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천공항 내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에서 1~2시간 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긴급여권 발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각국의 출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931-651

입국 조건에 따라 상이한 잔여 여권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출국에 불편을 겪는 민원인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권만료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여권의 유효기간은 통상 10년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여권명의인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여권만료 문자알림서비스 운용 시 여권명의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잘못 전달되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여권 발급 시 이러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알리고 수신동의를 받아서 서비스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신규 여권 발급자에게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기존의 여권 보유자에게는 수신동의 절차 제공 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2018년도 월별 여권만료 건수 및 여권만료 문자알림서비스 발송 계획(안)]

(단위: 건)

구 분	만료 6개월전	만료 3개월전	당월 만료도래	총 발송횟수
1월	317,846	276,629	318,662	913,137
2월	254,499	310,723	263,900	829,122
3월	198,180	323,564	287,684	809,428
4월	290,306	317,846	276,629	884,781
5월	286,517	254,499	310,723	851,739
6월	332,264	198,180	323,564	854,008
7월	331,843	290,306	317,846	939,995
8월	253,661	286,517	254,499	794,677
9월	283,154	332,264	198,180	813,598
10월	265,113	331,843	290,306	887,262
11월	244,321	253,661	286,517	784,499
12월	264,338	283,154	332,264	879,756
계	3,322,042	3,459,186	3,460,774	10,242,002

자료: 외교부

가. 현 황

외교부는 공공외교 역량강화¹⁾ 사업을 통해 외국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지식·정책 등 3개 연성자산(soft power)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증진시키고, ‘국민참여형 공공외교’를 통해 민간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143억 9,8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내역사업(스포츠문화외교, 재외공관 한국주간행사 지원 등)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22억 4,300만원,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공공외교담당관 회의, 공공외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전년 대비 46.3% 감소한 12억 3,500만원,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내역사업(공공외교현장실습원, 글로벌문화꿈나무 등)은 전년 대비 61.7% 감소한 9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역사업의 주된 감액 사유는 사업 종료 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의 사업 이관이다.

[2018년도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외교 역량강화	13,442	16,004	16,004	14,398	△1,606	△10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9,434	11,304	11,304	12,243	939	8.3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2,115	2,300	2,300	1,235	△1,065	△46.3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1,893	2,400	2,400	920	△1,480	△61.7

자료: 외교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731-403

나. 분석의견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중 일부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개최 목적은 본부 주도 정책설명회 등 기존 사업들을 통해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에 공공외교담당관²⁾ 회의 개최를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본부와 재외공관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목표 하에 연 1개 지역/문화권의 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들에게 본부의 공공외교 기본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전문가의 조언 및 평가를 청취하며,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예산안
전문가 발표 사례비, 회의책자 제작 등	4.5
회의장 및 기자재 임차 등	6
항공료, 숙박비 등	46
업무 오찬 등	3.5
계	60

자료: 외교부

한편, 외교부는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내역사업에 본부 주도 정책설명회 개최를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6개 지역별로 공관 수요조사를 통해 평균 2개국 이상을 선정, 3~4명의 출장단을 파견하여 학계·언론계 간담회, 국민외교·공공외교 관련 기관 방문, 대학 강연, 정책공공외교 행사 주최 및 참석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각 국가에서의 사업 추진 시 재외공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자들에게 본부의 공공외교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공공외교담당관은 각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업무 담당자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본부 주도 정책설명회의 경우 일부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특정 지역·문화권의 공공외교담당관 회의와 병행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부와 공공외교담당관 간 소통을 위한 활동은 연 1개 지역/문화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외교담당관 회의보다 연 6개 지역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본부 주도 정책설명회와 통합·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부 주도 정책설명회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지역	나라	도시	일정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 오만찬)	총액
				항공료	숙박비	일식비	수용비	임차료		
동북아	중국	베이징, 홍콩	2박3일	5	3	2	3	3	2회×2=4	20
	일본	도쿄, 히로시마	2박3일	5	6	4	4	5	3회×2=6	30
남아태	인도	뉴델리, 첸나이	3박4일	8	4	3	5	4	3회×2=6	30
	호주	멜번, 시드니	3박4일	12	5	3	6	6	4회×2=8	40
북미	미국	LA, 샌프란	4박5일	15	6	4	8	7	5회×2=10	50
		워싱턴, 뉴욕	5박6일	18	8	4	10	8	6회×2=12	60
	캐나다	오타와, 몬트리올	5박6일	15	6	4	10	8	6회×2=12	55
중남미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리아	6박7일	20	7	3	10	8	6회×2=12	60
	나카라과	마나과	3박4일	15	3	2	8	4	4회×2=8	40
유럽	독일	베를린, 뮌헨	3박4일	20	6	4	10	8	4회×3=12	60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	3박4일	20	6	4	10	8	4회×3=12	60
아중동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 두바이	3박4일	18	4	3	10	7	4회×2=8	50
	남아공	더반	2박3일	18	3	2	10	8	2회×2=4	45
합 계										600

자료: 외교부

또한 외교부는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내역사업에 전문가 초청, 민간외교 조사용역 및 정책연구 등 글로벌 정책 및 인적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을 활용하여 공공외교담당관 회의의 목적 중 하나인 민간전문가 조연 및 평가 청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공공외교법」 제11조3)에 따라 각종 공공외교 업무프로세스를 정보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외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5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외교부에 의하면 공공외교종합정보시스템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등 공공외교 수행기관의 공공외교 활동 계획과 추진현황, 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인트라넷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2018년 내에 구축을 완료하여 연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동 시스템은 공공외교 활동 프로세스의 시스템화를 통해 공공외교 업무표준을 수립하고,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중합시행계획을 등록·통보·운영하며, 공공외교 실태조사 및 통계·모니터링 서비스, 공공외교 활동지원 DB 구축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향후 이를 활용하여 본부의 공공외교 기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사업 등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2018년도 예산안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 본부의 공공외교 기본정책 방향 설명 - 민간전문가의 조언 및 평가 청취 - 성공·실패 사례 공유	60
본부 주도 정책설명회	- 학계·언론계 간담회 - 국민외교·공공외교 관련 기관 방문 - 대학 강연 - 정책공공외교 행사 주최 및 참석	600
글로벌 정책 및 인적기반 조성 사업	- 전문가 초청 - 민간외교 조사·용역 및 정책연구	859
공공외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공공외교 업무표준 수립 -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중합시행계획 등록·통보·운영 - 공공외교 실태조사 및 통계·모니터링 - 공공외교 활동지원 DB 구축 및 지원	562
계		2,081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공공외교법」

제11조(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둘째, 공공외교현장실습원 사업은 사업목적에 감안하여 사업추진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활동 및 업무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 중 대학교 4학기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일부를 선발하여 해외 공공외교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고자 2013년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내역사업에서 공공외교현장실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에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7년에는 57개 공관에 총 72명(상반기 32명, 하반기 40명)이 공공외교현장실습원으로 선발되어 파견되었고, 2018년에는 총 4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공공외교현장실습원 파견 현황(2017년)]

(단위: 명)

공관명	인원		공관명	인원		공관명	인원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광저우	-	1	브라질	1	1	우한	1	-
그리스	-	1	브루나이	-	1	이르쿠츠크	1	-
네덜란드	1	1	블라디보스톡	-	1	이탈리아	1	-
니카라과		1	삿포로	1	1	인도	1	-
다렌	1	-	상트페테르부르크	-	1	인도네시아	1	-
덴마크	1	-	선양	1	-	일본	1	1
라오스	1	-	세르비아	1	1	제네바	-	1
러시아	-	1	스리랑카	1	-	체코	1	1
루마니아	-	1	스웨덴	1	1	칭다오	1	1
르완다	-	1	시카고	-	1	크로아티아	1	1
말레이시아	1	1	아르헨티나	1	-	키르기스스탄	1	-
멜번	1	1	아세안	1	1	탄자니아	1	-
모잠비크	-	1	아제르바이잔	-	1	트리니다드 토바고	1	-
몽골	1	1	알마티	-	1	파나마	-	1
뭄바이	-	1	오만	-	1	페루	1	-
바레인	-	1	오스트리아	1	-	포르투갈	-	1
밴쿠버	-	1	요르단	-	1	호주	-	1
베트남	1	1	우루과이	1	1	홍콩	-	1
벨라루스	-	1	우즈베키스탄	1	1	계	32	4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파견대상 공관은 재외공관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하며, 공공외교현장실습원은 적극성 및 참여 의지, 어학능력 등 관련 성적, 재외공관 요청사항(국악전공자, 컴퓨터 활용능력 등), 국가유공자 등 가점부여사항, 남녀 비율, 지방대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선발된 공공외교현장실습원은 6개월 간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업무담당자를 보좌하면서 재외공관이 시행하는 공공외교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문화행사, 한글학교 관련 업무, 문화업무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통역 지원, 홍보물 관리, 홈페이지·SNS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외교부는 공공외교현장실습원 사업의 목적을 취업 지원과 국민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청년들의 글로벌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차세대 인재양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을 대학 4학기 이상 수료자로 정하고 있어 공공외교현장실습원 경험이 관련 분야 취업으로 직접 연계되기 어려운 측면⁴⁾이 있고, 차세대 인재양성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사전 및 사후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외교부는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4) 사업이 시행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외교현장실습원 파견복귀자 총 167명 중 공공외교 관련 분야 취업자 수는 6명이다. 대학 4학기 수료자가 현장실습원 파견 복귀 후 취업하기까지 최소 2~4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취업자 수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

가. 현 황

외교부는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¹⁾ 사업을 통해 테러, 사이버안보, 해적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 대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대테러중점공관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1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292	366	366	366	0	0
대테러중점공관운영	160	196	196	184	△12	△6.0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대테러중점공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모든 재외공관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재외국민 보호 활동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대테러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국제공조체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테러중점공관 운영 제도는 2009년 3월 예멘 테러 발생 이후 국무총리 주재 제3차 테러대책회의에서 신설이 결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외교부는 테러 관련 정보수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테러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테러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정세, 테러 발생 현황, 관련 실·국 및 공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대테러중점공관을 선정하고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531-402

2017년에는 테러 빈발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국가 소재 공관인 ‘테러위험국 공관’ 27개와 테러 발생 빈도는 낮으나 관련 정보를 다량 보유하여 우리의 대테러 정보 수집 활동 주요대상이 되는 국가 소재 공관인 ‘테러정보수집 대상국 공관’ 13개 등 총 40개 공관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외교부는 대테러중점공관 운영 사업의 목적은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이며, 동 사업비는 재외공관이 테러와 관련하여 주재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테러중점공관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보고서 및 온라인 DB를 구축하여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외교부 본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에 전문으로 보고하며, 관련 인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테러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수립하는 등으로, 이는 대테러중점공관 뿐만 아니라 여타 재외공관에서도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로 보인다.

전 세계 테러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테러중점공관으로 선정된 공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관계 부처나 기관 등과 함께 공유·분석함으로써 범정부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국제공조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사업 내실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 현 황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¹⁾ 사업을 통해 해외 사건·사고 예방활동과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팀 파견, 법률자문 제공 등의 대응체계 최적화 활동, 영사콜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외국민보호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111억 1,300만원이다. 이 중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사업의 예산안은 1억 2,900만원으로, 각종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430-01목) 1억 1,800만원과 사무실 배치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일반수용비(210-01목) 1,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도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외국민보호	7,899	10,430	10,430	11,113	683	6.5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0	0	0	129	129	순증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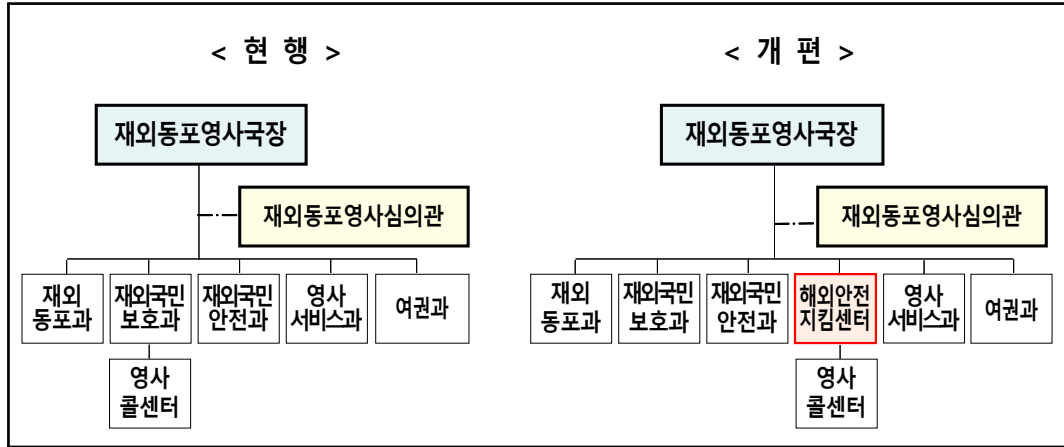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연락체계 및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대응기능의 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외교부는 24시간 해외 사건·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소속으로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기존에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영사콜센터는 해외안전지킴센터에서 운영하게 된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831-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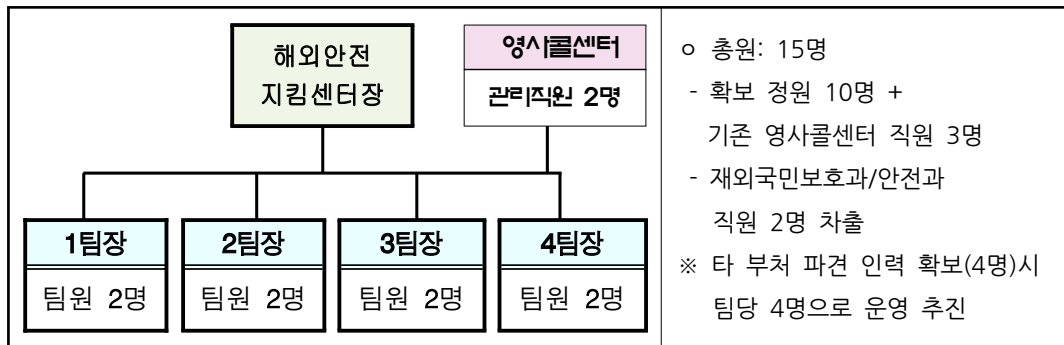
[해외안전지킴센터 직제 반영 계획(안)]



자료: 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센터장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영사콜센터 직원 중 3명과 재외국민보호과 및 재외국민안전과 직원 2명의 소속이 해외안전지킴센터로 변경될 예정이다.

[해외안전지킴센터 인력 구성 계획(안)]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또한,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팀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된 4개의 대응팀이 12시간 쉼 교대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 계획(안)]

	1주							2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22시	A	A	C	C	A	A	A	C	C	A	A	C	C	C
22-10시	B	B	D	D	B	B	B	D	D	B	B	D	D	D

주: 분기별로 A-B팀간 / C-D팀간 근무시간 변경

자료: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의 기능은 ① 24시간 해외 사건·사고 및 테러·재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상부 보고 및 유관 부처 상황실에 상황을 전파하며, 대국민 실시간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상황과약 및 전파 기능, ② 골든타임 내 재외공관원 현장 파견을 지휘하고, 전세기 투입 등 비상철수를 지원하며, 신속대응팀 파견을 결정하는 사건사고 초동대응 지시·총괄·조정 기능, ③ 신속해외송금 및 긴급구난비 지원을 수행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기능, ④ 언론대응자료를 작성하고 기자단 대상 브리핑 등을 수행하는 언론대응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현재 재외동포영사국 내 재외국민보호과와 재외국민안전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시 해당 과와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외안전지킴센터/재외국민보호과/재외국민안전과 업무분장 계획(안)]

		일상 업무	초동 대응	후속 대응	사후 조치
해외 안전 지킴 센터	영사콜 센터	○ 일반 영사민원 대응 ○ 통역 서비스 제공 ○ 사건사고 접수 ⇒ 대응팀 보고	-	-	-
	4개 대응팀	○ 24시간 사건사고 모니터링 ○ 일일 상황보고	○ 초기상황 전파보고 ○ 공관 지시 ○ 언론 대응 ○ 긴급구난 지원 ○ 피해자가족 지원	※ 재외국민보호과/ 안전과로 인계	-
재외국민 보호과 /안전과		○ 정책/법령/매뉴얼 정비 작업 ○ 여행경보제도 관리 ○ 안전여행 홍보 ○ 대내외 안전교육 ○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대국회 업무 ○ 타부처 협업 ○ 예산 업무	○ (대형 사건사고) 재외국민대책본부 설치	○ 주요 현안 관리 - 상황 지속 확인 - 관계국 협조 요청 ○ 피해자·가족 지원 ○ 언론 대응 ○ 국회 대응 ○ 재외국민대책본부 운영	○ 제도 개선 필요사항 반영 - 사건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 법령 개정 - 교육자료 보완 ○ 종합보고서 작성 ○ 예산 정산 등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근무시간 외 심야,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해외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직원 소집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해 신속한 초동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에서 24시간 발생하는 해외 사건·사고의 특성상 해당 과 직원들이 일과시간 이후 유·무선 수단을 활용하거나 사무실 재출근을 통해 대응 중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와 피로 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의 설명에 의하면,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센터는 초동대응까지만 수행하고 재외국민보호과와 재외국민안전과의 사건·사고 대응업무 자체가 해외안전지킴센터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응 기능과 관련하여 영사콜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야간 및 주말에는 외교부 직원 2명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에도 센터가 초동대응 기능을 수행할 경우 보고체계가 길어지거나 담당 과와의 업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실제 즉각적인 대응조치는 재외공관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초동대응 매뉴얼 개선 등 기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포함하여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글로벌센터¹⁾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한국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글로벌센터 사업과 한-아세안 간 쌍방향 문화·학술·인적교류를 위한 KF(Korea Foundation)아세안문화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36억 8,900만원으로, 이 중 글로벌센터 내역사업에 전년 대비 29.9% 감소한 17억 8,400만원, KF아세안문화원 내역사업에 전년 대비 37.6% 증가한 19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글로벌센터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글로벌센터	2,464	3,932	3,932	3,689	△243	△6.2
글로벌센터	2,464	2,548	2,548	1,784	△764	△29.9
KF아세안문화원	-	1,384	1,384	1,905	521	37.6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아세안문화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별화·내실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아세안문화원은 아세안문화에 대한 홍보·교육 및 문화교류 등을 담당하며, 2017년 9월 부산시에 개원하여 아세안 10개국의 결혼문화와 전통혼례복 및 소품으로 구성된 기획 전시와 아세안 각국의 공예품으로 구성된 상설전시를 진행 중이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국제교류기금 1734-402

아세안문화원 내역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은 아세안문화 전시(4억 3,900만원), 아세안문화 공연(2억 1,800만원), 아세안문화 영화(1억원), 아세안문화 교육/학술(4억 3,800만원), 관리운영비(7억 1,000만원)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안문화원 내역사업 2018년도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편성 내역	계
아세안문화 전시	- 기획전시 2건×155= 310 - 지자체/실천네트워크 협력전시 1건×15=15 - 상설전 유지보수 114	439
아세안문화 공연	- 정기문화공연 1건×50=50 - 한-아세안문화페스티벌 1건×156=156 - 지자체/실천네트워크 협력공연 2건×6=12	218
아세안문화 영화	- 아세안 기획 및 정기영화제 5건×20=100	100
아세안문화 교육/학술	- 아세안 교육 및 문화체험 12×12개월=144 - 주한아세안 청년커뮤니티 2×12개월=24 - 브로셔 제작 2호×7=14 - 뉴스레터 발간 4호×7.5=30 - 아세안교류협력 해외지원사업 1건×80=80 - 한-아세안 문화교류포럼세미나 1건×50=50 - 한-아세안 청년 상호이해워크숍 1건×60=60 - 정보자료실 운영 3×12개월=36	438
관리운영비	- 직원사택보조비 7명×0.5×12개월=42 - 청사시설관리용역 300 - 보안경비(야간) 2×12개월=24 - 기타용역비 0.5×12개월=6 - 통신 및 공과금 132 - 비품 및 자산구입비 10 - 시설개보수비 1식×30=30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장비 4대×20=80 - 웹페이지 콘텐츠 운영 5.5×12개월=66 - 보험료(화재보험 등) 20	710
계		1,905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당초 외교부는 아세안문화원의 국제기구화를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하였으나,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외교부의 설명에 의

하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5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주한 외국공관과의 협력을 통한 쌍방향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2015년부터 동 센터가 글로벌센터²⁾로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온 경험이 있어, 아세안문화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아세안문화원의 운영주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³⁾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글로벌센터 운영 사업은 각 부처, 지자체, 민간 등에서 수행하는 문화교류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사업의 차별화를 강화하되 사업의 규모는 축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도 계획안도 전년 대비 30%가 감액되었다.

아세안문화원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글로벌센터 운영 사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교류 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아세안문화원 사업의 차별화·내실화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센터와 KF아세안문화원 2018년 계획안 편성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글로벌센터	아세안문화원
전시	- 기획전시 1건×140=140 - 협력전시 10건×15=150 - 지자체연계전시 4건×9=36	- 기획전시 2건×155= 310 - 협력전시 1건×15=15 - 상설전 유지보수 114
공연	- 기획공연 3건×50=150 - 지자체협력공연 3건×6=18	- 정기문화공연 1건×50=50 - 지자체/실천네트워크 협력공연 2건×6=12 - 한-아세안문화페스티벌 1건×156=156
강좌 (교육 학술)	- 주한외국인대상강좌 8건×15=120 - 국제교류자원봉사망 30	- 아세안 교육 및 문화체험 12×12개월=144 - 주한아세안 청년커뮤니티 2×12개월=24 - 브로셔 제작 2호×7=14 - 뉴스레터 발간 4호×7.5=30 - 아세안교류협력 해외지원사업 1건×80=80 - 한-아세안 문화교류포럼세미나 1건×50=50 - 한-아세안 청년 상호이해워크숍 1건×60=60 - 정보자료실 운영 3x12개월=36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글로벌센터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문화예술행사 50개국 대상 26건, 문화강좌 및 세미나 16건, 문화예술 국제협력 22건 등을 수행하였다.

3) 기획재정부,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17.5. pp.79~90.

가. 현 황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지원¹⁾ 사업에서 주요 국가 싱크탱크(Think Tank)의 한국 관련 현안에 대한 각종 연구활동 지원과 국내 민간외교단체의 국제교류활동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5.3% 증가한 63억 4,300만원이다. 이 중 해외정책 연구지원 내역사업에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54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사업이 신규 편성(20억원)된 데 따른 것으로, 한미 신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결정에 영향력이 큰 미국 싱크탱크 내 한국연구 활성화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도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지원	5,716	5,188	5,188	6,343	1,655	35.3
해외정책 연구지원	3,984	3,497	3,497	5,497	2,000	57.2

자료: 외교부

[2018년도 해외정책 연구지원 내역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세부 편성 내역	계
해외정책 연구지원	· 해외정책연구소 2,897(39개처×74.3백만원) · 차세대정책전문가네트워크 600(4개 지역×150백만원) · 한미미래비전 네트워크 2,000(신규)	5,497

자료: 외교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국제교류기금 1732-402

나. 분석의견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사업은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기존 사업들과의 통합·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사업은 미 싱크탱크 박사급 연구원의 한국 관련 정책연구를 지원하거나 미 싱크탱크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는 ‘코리아 펠로십’, 국내에서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여 주요 미 싱크탱크 내 시니어 석좌직 설치기반을 마련하는 ‘주니어 코리아 체어’, 한국인 연구원 시니어 석좌직이 있는 미 싱크탱크를 현재 2개처에서 4개처로 확대하는 ‘코리아체어 설치’, 미국 차세대 연구원 및 의원·보좌관 대상 한반도 현안 세미나·토론회 개최 및 방한초청을 추진하는 ‘한국 현안 세미나’, 미국 언론인 대상 한반도 세미나 개최 등 네트워킹을 수행하는 ‘언론 아웃리치’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사업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계획안
코리아 펠로십	- 싱크탱크 박사급 연구원의 한국 관련 정책연구 지원 - 미국 싱크탱크에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 관련 공동연구 및 논문발표 및 출판 등을 지원	268
주니어 코리아체어	- 3040대 박사급 연구원, 전직 주요부처 과장급 한국 전문가 양성 (주요 싱크탱크 내 코리아체어 설치기반 마련)	335
코리아체어 설치	- 시니어 석좌직을 현재 2개처(CSIS, Brookings Institute)에서 4개처로 확대(향후 5년 이내)	447
한국 현안 세미나	- 싱크탱크 협력, 차세대 연구원 및 의원·보좌관 대상 한반도 현안 세미나·토론회 개최, 방한초청 연계	614
언론 아웃리치	- 싱크탱크 협력, 미국 언론인 대상 한반도세미나 개최 및 네트워킹	336
계		2,000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²⁾ 사업에서 ‘미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내역사업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 코드: 일반회계 1133-401

사업 내용으로 미 주요 싱크탱크와 현지 세미나 개최, 싱크탱크·학계·언론 등 전문가 방한 초청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사업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2018년도 예산안
전문가(싱크탱크·학계·언론 등) 방한 초청 사업	- 서울 4박 5일 / 1회 초청비용 32 × 5팀(각 3명)	160
미 주요 싱크탱크와 현지 세미나 개최	- 1회(2지역) 세미나 개최 비용 119 × 4회	476
미 싱크탱크 정책연구용역	- 1회 발주비용 23 × 2회	46
계		682

자료: 외교부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정책 연구지원 내역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해외 정책연구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략문제연구소(CSIS) 내 한국 석좌 설치(2009년), 브루킹스연구소 내 한국 석좌 설치(2014년), 우드로윌슨센터 내 북한 관련 연구기반 구축 지원 및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 설립(2015년) 등 미 정책연구소의 한국 정책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해외정책연구소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9월 기준)	2018(안)
지원현황	11개국 20개처 21건	10개국 33개처 34건	13개국 31개처 37건	13개국 29개처 32건	27개국 71개처 85건 접수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2건, CSIS 1건, 우드로윌슨센터 1건 등 11건	브루킹스 연구소 1건, CSIS 1건, 우드로윌슨센터 2건 등 22건	브루킹스 연구소 2건, CSIS 2건, 우드로윌슨센터 1건 등 21건	CSIS 1건, 우드로 윌슨센터 1건 등 15건	-
계획액	1,555	2,145	3,377	2,897	2,897
집행액	1,547	2,135	3,367	1,625	-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미국 내 싱크탱크 관련 사업의 통합·연계 등 사업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 싱크탱크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해외정책 연구지원 (한국국제교류재단)	2018년도 계획안	해외정책 연구지원 (한국국제교류재단)	2018년도 계획안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외교부)	2018년도 예산안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해외정책연구소	2,897	-	-
코리아 펠로십	268				
주니어 코리아 체어	335				
코리아체어 설치	447	-	-	미 싱크탱크와 현지 세미나 개최	682
한국 현안 세미나	614				
언론 아웃리치	336			싱크탱크·학계·언론 전문가 방한 초청	
계	2,000	계	2,897	계	682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외교부는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¹⁾ 사업을 통해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주권 수호, 국제법적 기반 구축, 해양 및 남극 활동, 한·일청구권협정, 조약 번역 및 검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66억 8,500만원이다. 이 중 영토주권 수호 내역사업에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53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독도 홍보 및 인식제고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도 영토주권 수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	7,169	6,587	6,587	6,685	98	1.5
영토주권 수호	5,544	5,383	5,383	5,386	3	0.0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독도 홍보 및 인식제고 사업을 통한 인식 개선도 평가 등 실질적인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영토주권 수호 내역사업의 일환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산하는 ‘독도 홍보 및 인식제고’ 사업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외교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532-401

[2017년 독도 홍보 및 인식제고 사업 주요 내용]

구 분	수행주체	대 상	주요 수행 내용
국내 홍보	본부	내외국인	국제학술대회
해외 홍보	본부	외국인	홍보영상 제작·배포
	본부	외국인	다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본부	외국인	홍보물품 기획 및 제작
	본부	외국인	홍보책자 제작
	재외공관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재외공관 활동 지원

자료: 외교부

동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 결과 국내 또는 해외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대상별 인식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교부는 독도 홍보 사업을 통한 인식 개선도 평가와 관련,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가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서의 동영상 감상문 쓰기 행사 등의 일회성 사업을 통해 행사 참석자의 반응 및 행사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독도 홍보 사업의 성과지표는 대국민 독도정책설명회 건수, 정부 지지 언론보도 건수, 독도 다국어 동영상 월평균 조회수 등 정량적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어 독도 홍보 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

외교부는 독도 홍보콘텐츠의 경우 현재까지 제작한 홍보콘텐츠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 표명 등의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대대적인 신규 제작은 하지 않을 계획이나, 국제적 상황변화 등에 따른 콘텐츠 수정이나 각색소요 발생에 대비하여 2018년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독도 홍보에 따른 인식 개선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홍보콘텐츠를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독도 홍보 및 인식제고 사업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독도 홍보 및 인식제고	-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및 관리 - 홍보콘텐츠 제작 -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기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인식제고를 위한 학술 및 교육 등 지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외교부는 2017년 8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설립된 세계시민센터를 2018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시민센터지원¹⁾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은 11억 3,000만원이며, 해외경상이전(340-01목)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세계시민센터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세계시민센터지원	0	0	0	1,130	1,130	순증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세계시민센터의 운영 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센터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하인츠 피셔(Heinz Fischer)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설립한 단체이다. 동 센터는 2017년 7월 5일 오스트리아 국내법상 협회로 등록하였고, 향후 독립적 비영리기구로의 전환 및 준국제기구로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²⁾ 현재 센터 사무국은 오스트리아 외교부 내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중 외부 사무소로 이전하면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세계시민센터의 이사회는 공동이사장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국제교류기금 1734-404

2) 외교부에 의하면 현재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세계시민센터 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의 성격이나, 향후 세계시민센터가 국제기구로 등록되는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 형태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계시민센터 이사회 구성]

구 분	이 름	직 책
공동 이사장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Heinz Fischer	오스트리아 전 대통령
이사회	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
	Nawal El Moutawakel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Jeffrey Sachs	미 컬럼비아 대학교 지속가능개발 센터장 및 교수
	Johannes Kyrle	오스트리아 전 외교차관
	Ed Futa	‘국제로타리클럽’ 명예사무총장
	Jean Todt	국제자동차협회장
	Susan Myers	‘UN Foundation’ 선임 부총재
	Arrey Obenson	‘Junior Chamber International’ 사무총장
	Daniele Bodini	전 주UN 산마리노 대사
	Hugh Evans	‘Global Citizen’ 회장
사무국	Marcia Balisciano Elsevier	기업책임이사
	Monica Froehler	센터 (임시) 사무국장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세계시민센터는 평화를 고취하는 리더십, 여성·청년 역량 강화, 세계시민교육 등 3대 중점 분야에서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기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외교부에 의하면 현재 오스트리아 정부가 사무국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외교부 내 사무실과 관련 재정, 회계, 법률, 부동산 등 자문 및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쿠웨이트 정부는 100만 달러 기여를 약속(2017. 10. 9.)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제1항3)에 근거하여 세계시민센터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규모는 쿠웨이트 정부가 기여를 공약한 100만 달러와 동일하다. 2018년도 계획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주요국의 정치, 경제, 학술 등 각계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는 ‘글로벌 리더 포럼’ 사업 4억원, 국제평화연구소(IPI), 함마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2013.7.16.>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솔트재단 등 평화구축 관련 기관과 분쟁 해결·조정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급 인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평화의 리더십 네트워크’ 사업 3억원, 여성·청년 계층에 멘토링, 교류, 근무기회 등 실질적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청년 역량 강화’ 사업 3억원, 평화의 지속화, 지속가능개발(SDGs), 인권·민주주의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의지를 함양하는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 사업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세계시민센터 지원 사업 2018년도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내역	산출근거	계획안
세계시민센터 지원	글로벌 리더 포럼	- 행사기획 50 - 학술연구 50 - 인사초청 300	400
	평화의 리더십 네트워크	- 행사기획 50 - 교육활동 60 - 네트워크 DB 구축 40 - 인사초청 150	300
	여성·청년 역량 강화	- 교류·멘토링 행사 50 - 근무기회 제공 250	300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	- 커리큘럼 개발 50 - 시스템 구축 20 - 파일럿프로그램 운영 60	130
합 계			1,130

자료: 외교부

다만, 센터의 사업방향 및 수행계획은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창립이사회인 제1차 이사회 회의(2017. 8. 4)에서 센터의 비전만이 공유되었을 뿐 2018년도 사업방향 및 수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결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2018년 1월에 개최되는 제2차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결정될 사업수행계획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은 1,3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8억원(26.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8억원, 남북협력기금 1,362억원이다.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498	2,394	2,394	1,756	△638	△26.6
- 일반회계	1,498	2,394	2,394	1,756	△638	△26.6
기 금	36,925	106,767	106,767	136,179	29,412	27.5
- 남북협력기금	36,925	106,767	106,767	136,179	29,412	27.5
합 계	38,423	109,161	109,161	137,935	28,774	26.4

주: 총수입 기준

자료: 통일부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은 1조 2,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660억원(5.5%)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27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462억원이다.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12,692	244,762	244,762	227,288	△17,474	△7.1
- 일반회계	312,692	244,762	244,762	227,288	△17,474	△7.1
기 금	532,035	962,732	962,732	1,046,161	83,429	8.7
- 남북협력기금	532,035	962,732	962,732	1,046,161	83,429	8.7
합 계	844,727	1,207,494	1,207,494	1,273,449	65,955	5.5

주: 총지출 기준

자료: 통일부

나. 세입·세출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17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800만원(26.6%) 감소하였다.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498	2,394	2,394	1,756	△628	△26.6

주: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3,4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5억원(25.3%) 감소하였다.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05,192	464,762	464,762	347,288	△117,474	△25.3

주: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의 수입계획안은 1조 7,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8억원(13.6%) 감소하였다.

[2018년도 통일부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남북협력기금	1,060,666	1,970,786	1,970,786	1,702,003	△268,783	△13.6

주: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2018년도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의 지출계획안은 1조 7,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8억원(13.6%) 감소하였다.

[2018년도 통일부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남북협력기금	1,060,666	1,970,786	1,970,786	1,702,003	△268,783	△13.6

주: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라. 재정구조

2018년도 통일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 기금으로 1,200억원이 전출되었다.

[2018년도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1개 사업, 3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에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다.

[통일부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남북협력기금 (1개)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300
합 계		300

자료: 통일부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① 정세분석역량 강화 ②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③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사업 등이, 남북협력기금은 ① 이산가족교류지원 ② 경험기반(무상) 사업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정세분석역량 강화 사업은 정보상황실 운영 사업이 내역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증액되었고,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북한인권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이,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업은 사이버안전센터 이전 비용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은 이산가족상봉행사 확대 등에 따라 증액되었고, 경험기반(무상) 사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 증액되었다.

[통일부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정세분석역량 강화	773	773	1,747	974	126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300	300	1,659	1,359	45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1,596	1,596	2,523	927	58.1
남북협력 기금 (2개)	이산가족교류지원	6,085	6,085	11,985	5,900	97.0
	경험기반(무상)	138,921	138,921	247,978	109,057	78.5
합 계		147,675	147,675	265,892	118,217	80.1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통일부

2018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일반회계에 서는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안정적·지속적 통일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2.2억원)과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1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②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의 실현여건 조성을 위한 경험기반(무상) 사업(2,480억원), 이산가족 상봉확대를 위한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120억원) 등은 증액,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경험중단 상황을 반영하여 경제교류협력보 험 사업(100억원)과 2017년도 통합재정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인 개성공단 지원 사 업(312억원) 및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129억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다. 인도적 지원과 관 련한 구호지원 사업(4,486억원) 및 민생협력지원 사업(2,301억원)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 었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사업(3억원)에 통합 편성되었다.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 속가능한 통일·남북관계 여건을 조성하고자 ‘정부-국회-국민’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통일 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일국민협약 모델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등 충분한 조사·연구 및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 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통일국민포럼은 유사한 목적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은 지역통일교육센터 18개, 지역통일관 13개, 북한이탈 주민 지역적응센터 23개 등 각 지역별 통일 관련 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통합하 여 대국민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별로 총 16개 설치를 계획 중인 사업으로, 각 기관 및 사업들의 정책 목표 및 정책 대상자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합의 효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졸업 이후 초기정착지원, 지역적응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안내, 심리 및 진로상담, 취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와주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마다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기존 센터의 지정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2012년 이후 매년 센터의 수가 변경되고 있으므로, 단기적인 북한이탈주민 인원 증감 뿐만 아니라 기존 탈북민의 수요 및 센터별 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통일부는 통일정책 추진¹⁾ 사업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통일 대비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통일 준비과정의 정책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2018년에는 신규 내역사업으로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을 편성하였다.

통일정책 추진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7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하였다. 이 중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에 2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통일정책 추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통일정책 추진	597	621	621	748	127	20.5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0	0	0	220	220	순증

자료: 통일부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일·남북관계 여건을 조성하고자 ‘정부-국회-국민’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일부는 사회적 협약의 3대 기능인 의견수렴, 협의·의결, 사후 이행점검 기능을 통일국민협약에 적용하여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① 통일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 등 협약 체결을 위한 각계 시민사회·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수렴’ 단계, ② 국회(여야),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심 협의체에서 협약의제, 협약내용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협의·의결’ 단계,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③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협약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는 ‘사후 이행점검’ 단계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도별 추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2018년도에는 의견수렴 단계에 해당하는 통일국민포럼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내역사업의 2018년도 사업계획]

단계	내용	2018년도 추진계획
① 의견수렴 단계	통일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 등 협약 체결을 위한 각계 시민사회·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	○ 통일국민포럼 운영 - (내용) 17개 시도 중 주요지역 선정,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국민 직접소통 및 의견수렴 - (시기/형식) 월 1~2회/ 세미나·설명회·공청회 등 - (대상) 분야별 오피니언 리더, 직능·지역별 단체·대학생 등 일반 시민 ○ 전문가 정책연구용역 - (내용) 통일문제에 적용가능한 협약 추진체계, 사회적 합의·공론화 프로세스 설계, 법·제도화 방안 등을 종합한 협약 추진모델 개발 ○ 고위 및 실무협의회 운영 - (내용) 통일국민협약 등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국회-정부간 상시·정례적 협의 - (시기) 월 1회 - (대상) (국회) 외통위 여야 간사 및 전문위원 등, (정부) 통일부·국무총리실·민주평통 등
② 협의·의결 단계	여야(국회)·정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심 협의체에서 협약의제, 협약내용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단계	-
③ 사후 이행점검 단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협약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는 단계	-

자료: 통일부

1-1. 통일국민포럼의 효율적 운영 필요

가. 현 황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고위 및 실무협의회 운영 2,000만원, 전문가 정책연구용역 1억원, 통일국민포럼 운영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통일부는 국민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통일국민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계
고위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 15, 임차료 3, 사업추진비 2	20
전문가 정책연구용역	대국민 인식조사 모델 개발 등 100	100
통일국민포럼 운영	세미나 및 공청회 78, 임차료 20, 국내여비 2	100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국민포럼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제고하고 맞춤형 사회적 공론화를 수행하기 위해 통일정책 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4년부터 주요도시 순회 공청회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통일교육 내실화²⁾ 사업에서는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에 2004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통일기반 조성³⁾ 사업에서도 뉴미디어·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을 수행하는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사업 등 국민 참여와 소통 및 공감대 확산 노력을

2) 코드: 일반회계 5031-309

3) 코드: 일반회계 1031-301

지속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 운영⁴⁾ 사업 및 지역협의회 활동추진⁵⁾ 사업 중 통일시대 시민교실 사업과 지역통일활동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 분야 국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 용	2017 예산	2018 예산안
통일부	통일정책추진	통일국민포럼	·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	-	100
		주요도시 순회 공청회	· 통일방안의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 · 맞춤형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도출	38	33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지역통일 교육센터	·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기회 확대 ·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1,850	1,750
	국내 통일기반 조성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 뉴미디어·온라인 매체를 통한 대국민 소통	1,988	2,002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자문회의 운영	통일여론 수렴·분석	· 국민여론조사 등 통일여론 수렴·분석	4,211	4,840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통일시대 시민교실	· 남북관계 및 통일·대북정책 이해 증진 · 통일여론 수렴	410	410
		지역통일활동 지원	· 정기회의를 통한 지역 통일의견 수렴 ·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확산	2,570	2,144

자료: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와 같이 기존에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통일국민포럼을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코드: 일반회계 1031-300

5) 코드: 일반회계 1031-302

1-2. 통일국민협약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사업 추진 필요

가. 현 황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모델 개발 및 협약 내용 연구용역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1억원을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하였다.

[통일국민협약 모델 개발 및 협약 내용 연구용역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세 목	산출 내역	금 액
정책연구용역 (260-01목)	■ 인건비(책임 1, 공동 5, 연구보조원 4 등 총 10명, 6개월) : 80백만원 - 통일국민협약 모델의 이론적 검토 및 사례연구 등 병행, 지속가능한 공론화 프로세스 설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연계된 협약 내용 연구 등 ■ 경비 등: 20백만원 - 각종 회의비(연구진간 회의, 용역상황 점검회의 등)	100백만원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국민협약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 등 충분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2018년도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내역사업으로 고위 및 실무협의회 운영, 전문가 정책연구용역, 통일국민포럼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국민협약의 개념이나 추진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공론화 과정을 포함한 통일국민협약 모델 및 추진방식을 명확히 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의 효과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¹⁾ 사업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기획 및 조정,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2018년부터 신규 내역사업으로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167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이 중 지역통일센터 1개소 신규 설치를 위해 15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설치비와 운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력계획 수립 및 직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건비는 편성되지 않았다.

[2018년도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6,503	15,084	15,084	16,746	1,662	11.0
지역통일센터 설치	0	0	0	1,500	1,500	순증

자료: 통일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331-300

나. 분석의견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의 물리적·기능적 연계·통합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은 지역통일교육센터 18개, 지역통일관 13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23개 등 각 지역별 통일 관련 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통합하여 대국민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광역 지자체별로 총 16개를 설치할 계획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건축 중인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지역통일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²⁾ 이는 사업간 연계 부족, 사업별 위탁주체 상이, 서비스의 질적 차이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지역통일센터 설치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2년~	합계
지역통일 센터 설치	-	-	1개소 설치· 개관	-	3개소 설치· 개관	-	12개소 설치· 개관	-	16개소
소요 예산	-	-	1,500	596	5,096	2,384	20,384	9,536	39,496
남북통합 문화센터 건립	-	-	건립 공사 (~19년 말)	개관	-	-	-	-	-
소요 예산	6,489	6,687	5,749	7,212	-	-	-	-	26,137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강좌, 문화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일 문제 이해 증진을 위한 기능을 갖고 있고, 지역통일관은 북한 관련 물품 및 통일 관련 기획전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탈북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초기지원(전입신고, 지역사회 안내) 및 지역적응(직업탐색,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지역통일센터로의 통합 대상인 각 기관 및

2) 남북통합문화센터는 탈북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남북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말 완공 예정이다. 센터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261억 3,700만원이며 2018년도 예산안에는 57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사업들의 정책 목표 및 정책 대상자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통합의 효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북한이탈주민 적응교육 기능은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지역통일관의 통일교육 및 전시 기능과는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통일센터 통합 대상 기관 및 사업 현황]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목 적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등	올바른 통일관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에 기여	최초 거주지 편입 탈북민의 신속한 지역적응 지원
설치 근거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	-1)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 및 제1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
연 혁	2004년부터 운영	1988년부터 운영	2009년부터 운영
대 상	지역주민, 지역청소년	지역주민, 지역청소년, 관광객	거주지 편입(하나원 수료) 북한이탈주민
운영방식	지역 내 위상, 인적자원 및 콘텐츠를 갖춘 대학(부설 연구소 포함)을 대상으로 17개 지역센터 지정	오두산전망대는 통일부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 / 11개 지역통일관은 지자체·민간·학교 등에서 설치·운영	민간단체위탁, 3년 주기 평가 후 재지정
현 황	중앙(1), 서울(1), 부산(1), 대구(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2), 강원(1),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1), 경남(1), 제주(1) 총 18개	서울(1), 인천(1), 경기(1), 강원(2), 대전(1), 충남(1), 충북(1), 부산(1), 경남(1), 광주(1), 제주(1) 총 12개	서울(4), 부산(1), 대구(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4), 강원(2),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1), 경남(1), 제주(1) 총 23개
운영실적	2017년 8월말 기준 총 1,157회 / 161,723명 대상 교육 실시	2017년 6월말 기준 총 547,324명 방문	2016년 기준 탈북민(1,211명) 대상 초기정착지원 66명, 지역적응지원 4,279건, 취업지원 283건 등 ²⁾

주 1) 2017년 9월 현재 지역통일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16.12.29.)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임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23개소 평균 실적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간 기능과 성격이 다르므로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업별 위탁주체가 상이하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위탁주체가 상이한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사업 간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면 먼저 각 사업의 수행 과정과 서비스 수준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8년도에 지역통일센터가 어느 지역에 설치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³⁾ 설치지역 결정시 해당 지역의 지역통일센터, 지역통일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공간적·기능적 통합·연계에 따른 인력 및 공간 재배치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3) 통일부는 탈북민 수, 통일관련 인프라 현황, 통일교육 수요 등 실수요 측면과 파급효과, 지자체 관심도, 통일관련 서비스 장려 필요성 등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지역통일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 현 황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¹⁾ 사업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내역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졸업 이후 초기정착지원, 지역적응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안내, 심리 및 진로상담, 취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와주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167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내역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8.1%가 증가한 49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분 3억 7,100만원에는 하나센터 1개소 증설 예산안 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6,503	15,084	15,084	16,746	1,662	11.0
북한이탈주민 지역적 응센터 운영	4,595	4,595	4,595	4,966	371	8.1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단기적인 북한이탈주민 인원 증감 뿐만 아니라 기존 탈북민의 수요 및 센터별 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센터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통일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마다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기존 센터의 지정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0년 30개, 2012년 32개, 2014년 31개, 2015년 29개, 2016년 23개로 변경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연도별 현황]

(단위: 개)

	'09	'10	'11	'12	'13	'14	'15	'16	'17
센터 수	6	30	30	32	32	31	29	23	23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감소²⁾로 인해 지역별 전입 인원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센터별 역량을 균등화하며 지원 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하나센터 3기(2016~2018년) 출범을 계기로 센터 수를 29개에서 23개로 축소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탈북민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경기지역은 2개를 축소하여 4개 센터로 조정) 등을 제외한 16개 지자체별로 가장 우수한 센터 1개씩만을 재지정하였고, 사업성과가 낮거나 관리인원이 300명 이하인 센터는 인근 센터로 통합하였다. 한편, 통합에 따른 사각지대 및 접근성 문제는 탈북민 100명 이상 거주 지역에 협력사무소 14개소를 지정하여, 전담 직원 및 전문상담사를 상주 또는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단위: 명)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6 (잠정)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86	8,891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507	21,914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593	30,805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및 협력사무소 운영현황(2017년)]

(단위: 개)

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협력사무소	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협력사무소
서울	4	-	경기 북부	1	2
부산	1	-	강원 남부	1	1
대구	1	1	강원 북부	1	2
인천	1	-	충북	1	1
광주	1	-	충남	1	1
대전	1	1	전북	1	1
울산	1	-	전남	1	1
경기 동부	1	-	경북	1	1
경기 서부	1	2	경남	1	-
경기 남부	1	-	제주	1	-
계				23	14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센터 수를 조정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통일부는 센터 3개소 추가 설치를 계획(지역내 탈북민 수, 신규전입 탈북민 수 등을 고려, 인천, 경기서부, 경기 북부센터 분할·신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1개소 추가 설치에 필요한 2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현재의 협력사무소 체계에서는 기본적인 상담 등 민원성 사무만 가능할 뿐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경기도 등 탈북민이 밀집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상 한계가 있으며, 탈북민들의 초기집중교육은 대부분 본 센터에서 진행되므로 센터 통합 후 탈북민들이 교육 참석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게 됨으로써 교육 참석률 및 수료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초기집중교육 수료율]

지 역	경기도	전국
수료율	74.3%(2015) → 58.8%(2016)	89.8%(2015) → 80.4%(2016)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통합·축소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협력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초기집중교육 수요가 23개로 축소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로 집중될 것이라는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센터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단순히 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것보다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한 다른 민간단체로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북한이탈주민 인원 증감 뿐만 아니라 기존 탈북민의 수요 및 센터별 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통일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¹⁾ 사업에서 이산가족 초청행사,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지원, 기록물 수집·전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내역사업인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 사업은 2017년부터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하였다. 이 중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 내역사업의 예산안으로는 전년과 동일한 3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197	1,100	1,100	1,000	△100	△9.1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	0	306	306	306	0	0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 사업은 타 사업의 기록물 수집·전시 사업과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2017. 3)하여 이산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이 보유한 기록물(사진, 편지, 서적, 구술자료, 정책자료, 보도물 등)들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수집된 기록물은 기존 전시시설(오두산 전망대) 등을 활용한 기획·상설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수집 대상은 이산가족 보유 자료 및 이산가족을 주제로 생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133-302

산된 모든 자료이다. 현재까지 이산가족 기증물 500여건, 국가기록원·이산가족단체·지자체 등 관련 자료 7,000여건 등이 수집되었다.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 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록물 수집·전시의 대상인 이산가족의 범위는 남북 이산가족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이산가족이며, 남북으로 인한 이산가족(납북자 가족)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남북 이산가족의 유형(남한 거주자의 입장에서)]

발생시기	북에 가족을 두고 온 경우	북으로 간 가족이 있는 경우
휴전 이전	· 월남 실향민(협의의 이산가족) · 북한출신 반공포로	· 월북자의 가족 · 전시납북자의 가족 · 미귀환 국군포로의 가족
휴전 이후	· 북한이탈주민	· 전시납북자의 가족

출처: 대한적십자사, 「2017 이산가족백서」

자료: 통일부

한편, 2017년 11월 파주 임진각에서 개관 예정인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²⁾에서는 납북자 관련 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집·전시 대상은 6·25전쟁 및 6·25전쟁납북피해자, 6·25전쟁납북피해 관련 실물자료, 연구자료, 논문,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등) 및 유품 등이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사업에서 수집·전시를 계획 중인 기록물 대상과 납북피해기념관 운영 사업에서 수집·전시를 계획 중인 기록물 대상이 모두 납북자 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기록물 수집·전시와 관련하여 통일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납북자 가족에 대한 기록물 수집·전시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	사업내용	2018년도 예산안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	306	납북피해기념관 운영	전시기획 및 운영	188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납북피해기념관 운영(코드: 일반회계 2137-301) 사업

가. 현 황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2016.9.4.)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¹⁾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28일 출범하였다. 통 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²⁾ 사업을 통해 직접 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역사업 중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사업과 북한인권실태 자료발간 사업은 2017년부터,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인권실태 조사·연구 사업은 2018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2018년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은 9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2018년 신규 사업인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인권실태 조사·연구 내역 사업에는 1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420	958	958	982	24	2.5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0	84	84	73	11	△13.1
북한인권실태 자료발간	0	152	152	149	3	△1.9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인권실태 조사·연구	0	0	0	100	100	순증

자료: 통일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북한인권법」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 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코드: 일반회계 2135-303

나. 분석의견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의 북한인권 실태조사·연구 사업 관련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센터”)는 「북한인권법」 제13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연구 및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부터 관련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자료 발간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인권실태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북한 거주 시 인권실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군포로의 경우 귀환국군포로나 탈북민 중 국군포로 후손의 증언을 통해, 납북자의 경우 귀환납북자나 탈북민 중 납북자 목격자 등의 증언을 통해, 이산가족의 경우 탈북자나 이산가족상봉 유경험자를 통해 인권실태를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즉, 동 사업은 탈북자와 이산가족에 대한 대면조사 방식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북한 거주 시 인권실태 조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10조3)에 근거하여 북한인권 실태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⁴⁾ 「북한인권법」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2018년에는 대상별(아동, 여성,

3)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2017년 9월말 현재 미출범된 상황이다.

장애인 등), 권리별(생존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주제별(해외이주노동자 등) 등 분야를 나누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 재단 운영⁵⁾ 사업에 관련 사업비 15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 목	산출 내역	금 액
기관운영출연금 (350-01목)	- 임직원 등 인건비 3,207 - 경상경비 1,562	4,769
사업출연금 (350-02목)	- 실태·조사 연구 1,524 - 조사연구 결과점검 및 평가 101 - 전문가 양성 및 연구지원 407 - 조사연구 DB 구축 382 - 조사연구 결과물 제작 682 - 정책개발 및 건의 606 - 시민사회단체 지원 및 협력 2,387	6,089
합 계		10,858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업무와 관련하여 센터와 재단 간 업무분장 및 연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에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북한 거주 시 인권실태 조사·연구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재단 출연금에도 북한인권 실태조사·연구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재단 출범 시 센터와 재단 간 관련 업무를 명확히 분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5) 코드: 일반회계 2135-304

가. 현 황

통일부는 2000년부터 이산가족교류지원¹⁾ 사업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등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 이산가족 면회소(금강산 위치)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9억원 증액된 119억 8,500만원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내역사업은 전년 대비 50억원(146.1%) 증액된 84억 4,200만원으로, 이산가족 대면상봉 행사를 2018년 3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7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고향방문 1회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9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 내역사업은 전년 대비 8억 3,000만원(103.7%) 증액된 16억 3,000만원으로, 민간 교류경비 지원에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교류 주선단체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6,000만원, 대한적십자사 업무위탁비 6,000만원 및 영상편지 1,500건 제작비용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통일 이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의 경우 1종 유전자검사 기 실시자들에 대한 2종(추가 2가지 항목) 검사비 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내역사업은 전년 대비 5,000만원(2.6%) 증액된 19억 1,300만원으로, 금강산에 위치한 이산가족 면회소 유지관리 및 운영비 외에 제2면회소 건립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이산가족교류지원	1,620	6,085	6,085	11,985	5,900	96.9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727	3,422	3,422	8,442	5,000	146.1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	115	800	800	1,630	830	103.7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0	1,863	1,863	1,913	50	2.6

자료: 통일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남북협력기금 2140-403

나. 분석의견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9월말 기준 이산가족 생존자는 6만 76명으로, 생존자 평균 연령이 80.8세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현황(2017년 9월말 기준)]

○ 이산가족 신청자 : 131,221명 ○ 생존자 : 60,076명 ○ 사망자 : 71,145명 ○ 생존자 평균연령 : 80.8세 ○ 연령별 생존자 현황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계
인원수(명)	11,668	25,775	13,841	5,082	3,710	60,076
비율(%)	19.4	42.9	23.0	8.5	6.2	100

자료: 통일부

이산가족교류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생사확인, 서신교환, 대면상봉, 화상상봉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00년 이후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교류 현황을 보면 생사확인 및 대면상봉의 경우 2008년, 2011~2012년, 2014년, 2016~2017년에는 실적이 없고, 서신교환은 2004년부터, 화상상봉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말 현재까지 계속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는 적은 숫자라도 꾸준히 이산가족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도별 이산가족교류 현황(2000년~2017년 9월말)]

구분	정부 차원										민간 차원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	대면상봉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건	건	명
2000년	792	7,543	39	39	201	1,720	202	674	-	-	447	984	152	392
2001년	744	2,670	623	623	100	899	100	343	-	-	208	579	170	493
2002년	261	1,635	9	9	-	-	398	1,724	-	-	198	935	208	616
2003년	963	7,091	8	8	-	-	598	2,691	-	-	388	961	283	677
2004년	681	5,007	-	-	-	-	400	1,926	-	-	209	776	188	470
2005년	962	6,957	-	-	-	-	397	1,811	199	1,323	276	843	95	261
2006년	1,069	8,314	-	-	-	-	594	2,683	80	553	69	449	54	105
2007년	1,196	9,121	-	-	-	-	388	1,741	278	1,872	74	413	55	167
2008년	-	-	-	-	-	-	-	-	-	-	50	228	36	97
2009년	302	2,399	-	-	-	-	195	888	-	-	35	61	23	51
2010년	302	2,176	-	-	-	-	191	886	-	-	16	15	7	18
2011년	-	-	-	-	-	-	-	-	-	-	3	21	4	14
2012년	-	-	-	-	-	-	-	-	-	-	6	16	3	6
2013년	316	2,342	-	-	-	-	-	-	-	-	9	22	3	5
2014년	-	-	-	-	-	-	170	813	-	-	6	11	5	10
2015년	317	2,155	-	-	-	-	186	972	-	-	4	26	1	4
2016년	-	-	-	-	-	-	-	-	-	-	6	43	3	8
2017년 (9월말 기준)	-	-	-	-	-	-	-	-	-	-	5	26	-	-
합계	7,905	57,410	679	679	301	2,619	3,819	17,152	557	3,748	2,009	6,409	1,290	3,394

주: 서신교환을 통한 생사확인 인원수는 2010년 이후부터 통계 집계 실시

자료: 통일부

가. 현 황

통일부는 사회통일교육 내실화¹⁾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사업에서 통일교육위원 자료지원, 통일교육위원 연찬회 현장체험, 통일교육위원 권역별 위원 연찬 등을 수행하는 ‘통일교육위원 시스템 선진화’ 사업과 전국 18개 지역통일교육센터(중앙통일교육센터 포함)의 경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센터 관련 평가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사회통일교육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51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2% 감소하였다. 통일교육위원 시스템 선진화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3,700만원이, 지역통일교육센터 허브화 사업은 전년 대비 5.4%가 감소한 1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7,758	6,649	6,649	5,105	△1,544	△23.2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2,670	2,668	2,668	2,568	△100	△3.7
통일교육위원 시스템 선진화	165	237	237	237	0	0.0
지역통일교육센터 허브화	1,907	1,850	1,850	1,750	△100	△5.4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교육원과 지역통일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5031-309

첫째,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학교통일교육 관련 업무 수행근거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의10에 따라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지도 사무를 관장한다. 통일교육원은 학교통일교육 강화²⁾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16년 1,072회, 2017년 8월말 기준 61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5억 7,100만원이다.

한편,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단체·시설로,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의 ‘지역통일센터 허브화’ 사업에서 경상비 및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통일순회강좌’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총 1,297회 중 93%인 1,214회를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였고, 2017년 8월말 기준 총 910회 중 90.2%인 821회를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원의 학교통일교육 사업 현황]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원		
사업명	통일순회강좌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구 분	장소	인원	소요예산	장소	인원	소요예산
2016년	초·중·고등학교 (1,214회)	264,452	77,571	초·중·고등학교 (1,072회)	60,845	667,998
	주민단체(83회)	5,680				
2017년 (8월말 기준)	초·중·고등학교 (821회)	109,110	43,010 ¹⁾	초·중·고등학교 (610회)	29,626	671,398
	주민단체(89회)	8,044				

주 1) 분기별로 예산 집행내역 집계를 하고 있어 소요예산은 6월말 기준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통일순회강좌’ 사업은 통일교육원의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사업에서 누락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교육원의 사업을 보완하고

2) 코드: 일반회계 5031-308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통일교육원의 사업은 소규모 학급 단위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며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통일교육센터의 경우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이 주된 업무이고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의 지역통일센터 허브화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통일교육 중심의 사업 추진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학교통일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교육의 질적 차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일교육위원회에 대한 통일교육원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³⁾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거나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고, 통일교육위원회는 통일교육 실시·관련 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회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통일교육기관 등은 이들에게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일교육위원회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위원 운영시스템 선진화’ 사업을 통해 자료지원 및 통일신문 발송, 국내위원 연찬 간담회 및 해외위원 연찬회, 권역별 위원 워크숍 등을 수행하고 있고, 2018년도 예산안은 2억 3,700만원이다.

3)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통일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위원 운영 시스템 선진화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실 적	예산액	집행액
2016년	통일교육위원 자료지원	○ 통일교육위원 자료지원 및 “통일신문” 발송(800명 대상)	237	167
	통일교육위원 연찬회 현장체험	○ 국내위원 연찬 간담회(3회, 120여명) ○ 해외위원 연찬회 (5.23~26, 3박4일, 34명)		
	통일교육위원 권역별 위원 연찬	○ 제20기 통일교육위원협의회 권역별 출범식과 함께 운영		
2017년 (9월말 기준)	통일교육위원 자료지원	○ 통일교육위원 자료지원 및 “통일신문” 발송(800명 대상)	237	165
	통일교육위원 연찬회 현장체험	○ 국내위원 연찬 간담회(3회, 120여명) ○ 해외위원 연찬회 (9.25~28, 4박5일, 33명)		
	통일교육위원 권역별 위원 연찬	○ 제20기 통일교육위원 공감과 소통 워크숍(9.25, 230여명)		

자료: 통일부

그런데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도 특강, 토론, 통일교육위원 간 친목도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교육위원 워크숍’을 각 지역통일교육센터별로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개최내역]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행사 일시 및 장소	참석인원	행사내용	소요예산
2016년	2016.3~12월(35회),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	1,978	특강, 토론, 교육위원 간 친목도모 등	103
2017년 (9월말 기준)	2017.3~9월(27회), 14개 지역통일교육센터	2,184	특강, 토론, 교육위원 간 친목도모 등	64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위원 연찬회’는 교육원의 연간교육 계획에 따라 연 4회(국내 3회, 국외 1회)에 걸쳐 실시하는 교육과정이고, ‘워크숍’은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반면,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위원 워크숍’은 센터의 사무총장 및 간사의 역량 강화와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과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으로 그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원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연찬회,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위원의 역량 강화와 소통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동일한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 통일교육위원 연찬회 및 워크숍 등 유사한 사업을 서로 다른 세부사업 및 다른 전담기관을 활용하여 추진함에 따른 중복 지원 및 사업체계간 비효율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위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통일부는 경협기반(무상)¹⁾ 사업의 일환으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통일준비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해 백마고지~군사분계선간 11.7km의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계획안은 659억 2,600만원이다.

[2018년도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경협기반(무상)	89,412	138,921	138,921	247,978	109,057	78.5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22,691	66,001	66,001	65,926	△75	△0.0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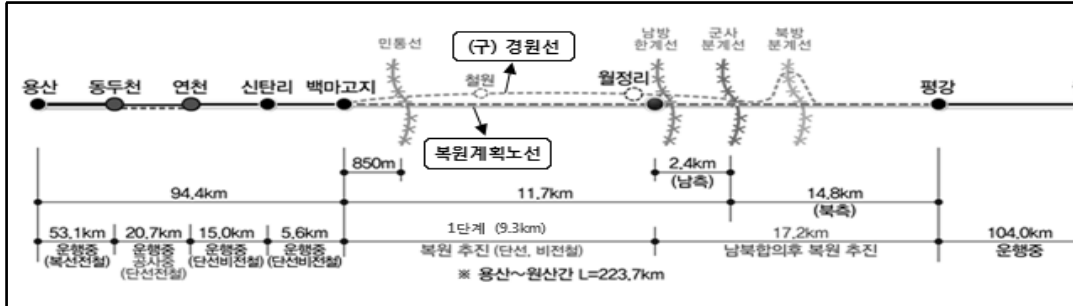
2017년도 계획에 비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남북간 단절된 경원선 철도의 우리 측 구간인 백마고지~군사분계선 간 11.7km를 우선적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간인 백마고지~월정리간 9.3km를 1단계로 연결하고, 남방한계선인 월정리와 군사분계선간 2.4km 연결은 남북 합의 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남북협력기금 3040-401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노선도]



자료: 통일부

1단계 사업의 당초 총사업비는 1,508억원, 사업기간은 2015~2017년으로, 2016년에 설계 및 공사의 약 35%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당초 92억 4,100만원에서 약 266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1단계 사업의 총사업비는 1,574억원²⁾으로 늘어나고,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연장되었다. 2017년 9월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잔여 토지에 대한 매수가 진행 중이며(매수율 86%), 올해 말 토지 매수가 완료되면 착공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1단계 공사는 2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말 공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시점은 2019년도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한 사업비 편성 및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계획액	변경계획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A-B)
2015	3,200	3,200	2,389	259	811
2016	63,085	28,344	22,691	75	5,653
2017	65,926	66,001	9,201	-	-
2018	65,926	-	-	-	-

주: 변경계획액에 이월액 포함

자료: 통일부

2) 전체 총사업비는 1,791억원이며, 이 중 2단계 사업비는 217억원이다.

가. 현 황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은 일자리창출 및 자립촉진¹⁾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31.4% 감소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당초 통일부는 도심가에 북한음식전문점을 개소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통일음식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통일음식문화타운을 구축하여 탈북민들의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문화·전시성 사업은 생략하고 탈북민 창업컨설팅·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와 함께 예산안이 감액(23.6억원→10억원)됨에 따라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으로 조정하여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자리창출 및 자립촉진	1,775	2,210	2,210	1,893	2,215	163.5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	0	1,006	1,006	690	△316	△31.4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2017년도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신규 창업자들의 사업 성과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은 소셜프랜차이즈 창업, 푸드트럭 창업, 푸드코트 입점 지원, 창업컨설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331-302

소셜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피피엘이 주관하는 창업교육 수료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점포당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등 평균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기준 교육생 21명 중 3명이 선정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연내 3명을 추가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푸드트럭 창업²⁾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탈북민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및 차량개조비 등 평균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현재 총 3명이 선정되었으며, 재단은 푸드트럭 5대 추가 설치에 대해 부산창업지원센터, 서울시 등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푸드코트 입점의 경우 2017년 9월 현재 반포 서래나루 7개 점포에 7명이 입점하여 운영 중이며,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등 1명당 평균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연내 2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소셜프랜차이즈 창업	- 창업교육 수료자 중 우수자 선발, 점포당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등 1명당 평균 2,500만원 지원 - 2017년 9월 기준 3명 선발 완료(3명 추가선발 예정)
푸드트럭 창업	- 공모를 통해 선정된 탈북민 대상 푸드트럭 및 차량개조비 등 1명당 평균 2,500만원 지원 - 2017년 9월 기준 3명 선정 완료(5개 추가설치 협의 중)
푸드코트 입점	-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등 1명당 평균 2,500만원 지원 - 2017년 9월 기준 7개 점포 7명 입점 완료(2명 추가선발 예정)

자료: 통일부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은 창업 분야가 음식과 관련된 소셜프랜차이즈 창업, 푸드트럭, 푸드코트 입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입점 후 최대 5년까지 컨설팅업체를 통한 개인당 10회 정도의 경영컨설팅 외에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없어 우리나라 요식업계 및 시장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민 개인의 운영능력에 따라 일자리의 안정성이 결

2) 푸드트럭 창업의 경우 재단이 한국마사회와 함께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기존에는 한국마사회 예산으로 탈북민 대상 과천, 부산 등 렛츠런파크 내 푸드트럭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17년부터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에 포함되어 재단 예산으로 탈북민 대상 렛츠런파크 외 장소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된다는 점,³⁾ 재단이 실시한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실업자들이 희망하는 고용형태에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는 5.9%에 불과하여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시범사업임을 고려하여, 2017년도 신규 창업자들의 사업 성과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통계청이 작성한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2016. 12.)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숙박·음식점업의 1년 생존율은 59.2%, 2년 생존율은 40.2%, 3년 생존율은 30.3%, 4년 생존율은 22.5%, 5년 생존율은 17.3%로, 전체 산업 내 활동기업의 생존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단위: %)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전체 산업	62.4	47.5	38.8	31.9	27.3
숙박·음식점업	59.2	40.2	30.3	22.5	17.3

자료: 통계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현황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백만원(16.7%)이 감소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	6	6	5	△1	△16.7

주: 총계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은 298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8,800만원(9.1%) 증가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6,487	27,326	27,326	29,814	2,488	9.1

주: 총계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18년도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정보화사업 추진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은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G-클라우드 구축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개)	정보화사업 추진	379	379	724	345	91.0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자문회의 운영 사업이 자문건의 기반시설 공사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억 2,900만원 증액된 48억 4,000만원 편성되었고, ②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이 지역협의회 근로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보수 증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억 7,100만원 증액된 141억 2,500만원 편성되었으며, ③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이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G-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4,500만원 증액된 7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정책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위원회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통일여론 수렴을 통한 자문·건의 기능 내실화를 위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참석률을 제고하여 회의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타 부처와의 형평 및 실질적인 소요를 고려하여 간부 자문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를 적정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부의장 24명, 분과위원장 10명, 분과위원회 간사 10명의 직무수행경비를 기타보전금(310-04목)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기타보전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법정위원회 참석률 제고 노력 필요

가. 현 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회의 운영¹⁾ 사업을 통해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법정위원회 및 국내·해외 지역회의, 직능별 정책회의를 개최·운영함으로써 지역별·직능별 자문위원들의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준비 내실화를 위한 정책건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도 동 사업 예산안은 48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하였다. 이 중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내역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8% 증가한 12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사 노후화에 따른 외벽 교체공사(6억원) 및 멀티미디어 회의실 설치(1억 4,300만원)이다.

[2018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문회의 운영	4,322	4,211	4,211	4,840	629	14.9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865	841	841	1,269	428	50.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나. 분석의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내역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정책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위원회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제19조²⁾), 상임위원회(제18조³⁾), 분과위원회(제18조제5항)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기 구	구 성	기 능
운영위원회 (제19조)	50명 이내	·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위원 위촉 해제 심사 · 기타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상임위원회 (제18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 의장이 명한 사항 심의 ·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심의
분과위원회 (제18조제5항)	10개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 50명 내외)	· 각 분야별 안건 심의 · 분야별 통일정책 연구 및 건의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상임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 현황(2017년 9월말 기준)]

(단위: 명)

분과명	위원 수	직무범위
① 기획조정분과위원회	12	정책건의 전략 수립, 정책건의 보고
② 평화발전분과위원회	51	남북관계 발전, 남북대화, 남북기본협정 등
③ 국제협력분과위원회	51	비핵화, 평화체제, 공공외교, 협력외교 등
④ 경제협력분과위원회	5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교류협력 등
⑤ 사회문화교류분과위원회	54	민족동질성, 문화·예술·체육교류 등
⑥ 통일법제분과위원회	53	통일국민협약, 법·제도, 인권 등
⑦ 국민소통분과위원회	52	지역·직능 대상 여론수렴, 평화·통일교육 등
⑧ 종교분과위원회	48	민족화해, 종교교류, 인도지원 등
⑨ 여성분과위원회	48	여성 평화담론 확산, 여성네트워크 등
⑩ 청년분과위원회	50	청년 평화담론 확산, 청년네트워크 등
계	472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런데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최근 활동실적을 보면 자문위원들의 참석률이 60% 내외로 나타나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정위원회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참석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및 참석 실적]

(단위: 명, %)

구분	상임위원회(연 1회 개최)			분과위원회(10개 분과위 각 분기별 개최)		
	정원	참석	참석률	정원	참석	참석률
2015	499	360	72.1	458	310	67.7
				458	313	68.3
				465	363	78.1
				465	285	61.3
2016	491	313	63.7	461	308	66.8
				464	287	61.9
				456	286	62.7
				456	265	58.1
2017	12월 개최예정			455	274	60.2
				455	280	61.5
				4분기 개최 예정		

주: 2017년의 경우 9월말 기준 분과위원회 2회 개최(2분기까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 현 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요 간부 자문위원들에게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수석부의장, 운영위 및 상임위 간사에 대한 활동지원비는 직책수행경비(250-02목)로, 부의장,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에 대한 활동지원비는 기타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에는 각각 1억 2,100만원과 1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간부 자문위원 활동지원비 지급 계획]

(단위: 천원)

	직책	월별 지급액	지급인원	연간 지급액
직책수행경비 (250-02목)	수석부의장	6,000	1명	72,000
	운영위원회 간사	1,500	1명	18,000
	상임위원회 간사	1,300	2명	31,000
	소계			121,000
기타보전금 (310-04목)	부의장	300	24명	86,000
	분과위원장	200	10명	24,000
	분과위원회 간사	150	10명	18,000
	소계			128,000
합계				249,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간부 자문위원들에 지급되는 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일부 간부 자문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직책수행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해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이

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중앙기관의 1급 직급을 보유한 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직책수행경비는 월 112만 5,000원이다.¹⁾ 그러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 상임위원회 간사에게 각각 월 150만원, 130만원을 직책수행경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타 부처와의 형평 및 실질적인 필요 경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직책수행경비 지급기준 및 지급계획 비교]

(단위: 천원)

정부기준단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급계획	
유형	월액	유형	월액
1급, 고공단 가등급 중앙기관장	750	운영위원회 간사	1,500
1급, 고공단 가등급 보조기관	700	상임위원회 간사	1,300

주: 국장급(월 55만원 이상 수령자) 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필요를 감안하여 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편성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부의장·분과위원장·분과위원회 간사 활동지원비를 기타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다.

기타보전금은 반대급부 없이 민간에 지급하는 이전지출로, 각종 유공자수당·재난지원금·각종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이 이에 해당²⁾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부의장 24명, 분과위원장 10명, 분과위원회 간사 10명의 활동지원비를 기타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의 직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비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1)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p.250.

2)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p.209.

□ 기타보전금(310-04목)

-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장학금 및 학자금, 재난지원금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증인·감정인·참고인·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등
-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 「국가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포함

집 필

총괄 |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심의 | 고기석 사업평가심의관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임종수 사회예산분석과장
박혜진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신봉진 예산분석관

지원 | 이정아 행정실무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7년 10월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556-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